주택 심의위는 전시용
환경성 검토 의견 무시
택지 개발계획 뒤엎고

'주택심의위원회는 한 차례도 안 열고 환경청 의견은 무시하고, 개발계획은 후퇴시키고…' 13일 열린 광주시의회의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허술한 도시 계획 및 주택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광주시의 주택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광주시 주택정책 총체적 난맥

시의회, 市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환경청 의견은 무시해도 되나? =광주시의회 유재신(민주·광산 2)의원은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인용, "광주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특급호텔 및 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행정을 펼쳤다"며 "환경정책기본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특급호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광주시에'해당 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항공기 소음이 연중 70웨를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을 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는데도,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특급호텔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주택심의위원회는 전시용(?)= 조호권(민주·북구 4)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광주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심의위가 열릴 정도의 주택정책의 별다른 문제가 없었냐"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광주지역 아파트 미분양률의 경우 지난 8월 기준으로 1만1천833가구로 지난 2005년(2천903가구)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고 수완지구 중대형 연립주택용지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경제 현안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광주시가 주택정책심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너무 무신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실 인구통계 작성 업체에 재용역=전우근(민주·북구 3)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2004년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상인구를 180만으로 과다 예측하면서 현재 주택 미분양 증가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호권 의원도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인용, "지난 2004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년도 계획인구를 22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고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 시정 조치를 받았다"면서 "이같은 용역 내용을 작성한 업체가 또 다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업체로 선정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택지개발계획 뒤엎고=유재신 의원은 수완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광주시가 수완지구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토지공사의 요청에 따라 건축 규제 등을 완화했다"면서 무원칙한 행정을 비판했다.

광주시가 지난 5월 건축선을 후퇴시키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법정 주차대수 기준을 축소해달라는 등의 토공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명품' 택지 조성 계획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회원들이 13일 광주시 동구 YMCA 백제실에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일본 사법부가 최종 기각한 데 대해 규탄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피해자 명예회복 위해 끝까지 싸울 것"

日 사법부 강제징용 손배소송 최종 기각 규탄

일제 치하에서 강제 징용돼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노역한 국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일본 사법부가 최종 기각한 데 대해 피해자와 유족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회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11일 일제 시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노역한 광주·전남 지역 출신의 피해자와 유족 등 7명이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한일 양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일본에서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는 한편 미쓰비시사 등에 자진해서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회 등 광주·전남 지역 9개 시민단체는 이날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절규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길이 막혔지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사가 저지른 강제연행과 불법 노동행위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판결과는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배관 기능경진대회 우승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 상수도 배관분야 기능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대의 상·하수도분야 행사인 '2008 워터 코리아(Water Korea)'의 상수도 배관분야 기능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배관분야 경진은 가정용 급수관 시공의 정확성과 신속성 등 현장기술을 겨루는 것으로 광주시팀은 경남과 강원, 충남 등과의 경기에서 완승을 거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문제 많아"

이철원 시의원 주장

광주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잘못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철원(민주·북구 5)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이 잘못돼 7천 가구가 넘는 서민들이 입주를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법의 입주자격, 입주자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리 지침의 수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제5조의 경우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12조에는 '본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해 입주 대기중인 7천 가구가 기다려도 교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기본 거주기간인 2년이 지나도 본인이 원하면 2년 단위로 계속 거주할 수 있어 똑같은 자격을 갖춘 다른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선정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측은 이와관련, "지난 2003년 관리지침을 세웠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검토하겠다"며 "이는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관·학 손잡고 다문화가정 지원

남구·광주여대·희망나무 '학습 멘토링' 협약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과 언어발달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광주지역 지자체와 대학, 민간단체가 나섰다.

광주시 남구청과 광주여대, 사단법인 희망나무는 13일 오전 광주여대 무등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멘토링과 언어발달 지체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증진과 학습지원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같은 다양한 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 상당수가 한국어 능력 부족, 문화부적응으로 학습부진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여대는 다음달 15일에서 내년 2월28일까지 산하 언어치료센터에서 4명의 교수진이 20명의 다문화 가정의 취학 전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체 학습멘토링, 음운인식 검사 등 2세들의 언어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